

집권 후반기 앞둔 文, 중폭개각·대북관계 등 과제 산적

文 “원활한 국정운영, 인사개편 필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법무장관 내정
남북회담 진행에도 대북상황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한 가운데, 중폭개각을 비롯해 대북관계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폭개각은 이미 총성을 울렸다. ‘가족비리’ 논란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내정한 게 그렇다. 문 대통령이 개각 및 대북관계 과제를 원활하게 해결해야만 ‘후반기 국정동력’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계 종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추 내정자를 시작으로 복수의 장관들을 교체하는 이른바 ‘중폭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문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인적쇄신에 따른 인사개편이 필요하다고 여권은 입을 모았다. 이를 문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전 장관 후임자로 ‘현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017년 11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인 추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했다. 이는 ‘부진했던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현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

치력을 발휘해 왔다.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거가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는 이 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들이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

다. 교체설에 오르내리는 정부 측 인사로는 이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강 장관과 정 장관에게 ‘총선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국무총리와 김 장관, 유 장관들은 장관직 수행 전 국회의원 및 도지사 등 정치인으로 활동한 바다.

다음은 대북관계다. 북한과 ‘갈등의 골’이 깊을대로 깊었다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 비해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강행 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현 정권에서 3차례 진행했음에도 ‘한반도 평화’는 커녕, 모든 게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단 것이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확대간부회의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주최고위원은 “(북한은) 김대중 정부에서 1차례, 노무현 정부에서 11차례, 이명박 정부에서 12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5차례”라며 “문재인 정부 땐 총 23회, 올해만 13차례, 심지어 문 대통령 모친상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만큼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역시 악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우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고 대변인은 한미정상간 전화 통화 후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알렸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내년 개최 세계군문화엑스포 ‘걱정되네’

늘어난 일정, 독자컨텐츠 부족 우려
세계 군복전시, 내부 반발로 불투명
'DX KOREA' 와 기간 절반 겹쳐

육군이 주도해왔던 ‘지상군(軍) 페스티벌’이 내년에는 ‘세계군(軍) 문화 엑스포’로 확대된다. 하지만 포장만 화려한 ‘질소총전 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상군 페스티벌은 육군이 대민친화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취지로 2002년 삼군 본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시작했다. 지상군 페스티벌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계룡시도 2007년부터 계룡군(軍) 문화축제를 벌려 왔지만, 독자적인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군문화엑스포 17일간 어떻게?

정부 관계자는 8일 “내년에는 육군이 주도하던 지상군 페스티벌이 없어지고, 계룡시와 충청남도, 재향군인회가 주도하는 세계군문화 엑스포로 14일 간(9월 18일~10월 4일까지) 열린다”면서 “육군 주도의 지상군 페스티벌이 통상 4일 동안 열리는 것과 달리 보름 정도 늘어난 일정이지만, 양질의 컨텐츠를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열릴 세계군문화 엑스포의 ‘세계군문화 생활관’의 전시 계획에 따르면 육군 생활관, 해군 생활관, 공군 생활관, 해병대 생활관, 여군, 미8군, UN군, 군생활 홍보관 등으로 크게 8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4개는 기존에 전시돼 온 육군 생활관을 해병대를 포함한 4개 군으로 늘려 놓았을 뿐이다. 여군 독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17일 간 진행되는 세계군문화 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육군 중심의 전시관 명칭이 바뀐 것 외에 기존의 행사장 구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 전시의 경우, 일각에서는 “여성군인도 남성군인과 같은 군인인데 여군만 따로 뺀다는 것은 여성을 아직도 여성으로 보는 진부한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8군 전시분야는 주한미군이 직접 진행해 왔고, UN은 세계 각국의 UN군의 모습이 아닌 한국군의 평화 유지활동이 전시돼 왔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세계 군복전시회를 통해 UN에 소속된 30여개 국가의 군복을 전시하기도 했지만, 육군 내부의 반발로 향후 전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래관의 전시도 비슷한 시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지상군 방위산업 전시회(DX KOREA)와 중복돼, 방산업체들과 군 실무자 등에게 이중의 부담감을 안길 수 있다.

◆국제 방산전시회와 중복, 컨텐츠도 부족

격년으로 개최되어온 지상군 관련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인 ‘DX KOREA’는 통상 지상군 페스티벌과 일정이 겹치지 않게 개최되어 왔다. 내년에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 행사기간의 절반이 세계군문화 엑스포와 겹치게 된다. 기존의 지상군 페스티벌 또는 DX KOREA 양쪽에 전시부스를 운영하거나 지원을 했던 일부 방산관계자들은 ‘기업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다.

한 방산업 관계자는 “양쪽 모두를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도 문제지만, 17일 간 행사를 지원하게 되면 기업의 업무 일정에서 적잖은 부담이 된다”며 “관람 인파에 따른 전시물 사후 정비 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세계군문화 엑스포가 세계적인 군문화축제를 표방하지만,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국의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와 같은 고급스런 기획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명의 군 관계자는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처럼 역대 지상군 페스티벌에 선진국 군악대가 앞다투어 온 적도 없고, 초청에 응한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연예인 출신 병이 동원되는 행사에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질소가 가득찬 과자봉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대리점주에 갑질… 본사직원 ‘해고 정당’ 판결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장낙원)는 해고를 당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에 다니던 중 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향응을 요구해 받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회사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한밤 중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직접 요구해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대리점주들과 함께 간 필리핀 골프 여행에서는 ‘지금처럼 하면 자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폭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A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갑질’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에 폭언하고 사적 선물을 받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기본권 침해 아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2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조속한 겹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

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신상정보 및 변경 정보 제출 및 출입국 신고, 범죄경력 정보 보존 관리 등을 정한 조항들에 대해 성범죄 억제 및 수사 효율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봤다. /손현경 기자